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343-354
<https://doi.org/10.29212/mh.2020..117.3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

박상철*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저)가 2020년에 발간한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설 ‘광복군’의 국방사적 가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군사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

1.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국방 100년의 성과

가. 대한민국 건군으로서 광복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광복군을 대한민국 국방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100년에 걸친 한국의 국방 관련 역사를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그리고 국민·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을 대주제로 하여 정리한 책이며, 대부분의 장에서 광복군을 한국 국방 분야의 시작으로 설정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자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상해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건국절’(建國節)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의 발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보수·진보 논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발간 도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보(一步)로 평가할 수 있다.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정부로서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조선의 독립을 통해 한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는다. 1987년 9차 개헌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0년여 년의 사회과학적 역사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현행헌법 전문에서 천명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영토는 빼앗겼지만 상해에서 망명정부를 건립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간직하면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의 역사를 확인하고 합의한 것이다. 건국절 주장은 잘못된 역사인식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역사왜곡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은 헌법 전문의 법적 강제력으로 헌법에 위배됨을 알아야 한다.¹⁾ 특히 현

1) 헌법 전문(前文)도 규범력과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과거에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행헌법의 전문은 한국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즉 보수·진보 간 합의로 작성되었기에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극단적 보수세력들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을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시킨 것은 현재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적 입장을 강변하다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무시하는 결과로 전이된 셈이다.²⁾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나. 1948. 8. 15 건국설의 두 가지 오류

1948. 8. 15 건국설 주장에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건국설이 일제의 한국식민 지배론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패망하였고, 한반도는 35년간 일본이 식민지배했으며,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한반도에서 퇴각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미군정 3년의 기간을 거친 후 한반도에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김상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당공천 출마자보다 무소속 출마자가 선거 기탁금을 더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한 적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를 근거로 정당공천 출마자와 무소속 출마자 간의 선거기탁금의 차별성은 불균등하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2)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功過)를 떠나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기에 국부(國父) 지위는 인정하여 ‘건국 대통령’으로서 국부(國父) 지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과장이며 종국적으로 현행헌법을 부정하는 정치이념적 오류라 할 것이다.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의 한국정치를 조장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1948. 8. 15 건국설이 기존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론에 대한 반론이라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겠지만 남남갈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정치적 시비이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정책과 이념의 대결은 정치영역에서 불가피하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 8. 15 건국설은 현재의 보수·진보, 좌·우 대결의 뿌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해방정국 당시 김구 등의 남북협상에 대해 비교우위에 두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김구 선생의 해방정국 당시 남북협상은 공산주의의 수용으로 보고 이승만 박사의 반공과 단독정부 수립은 새로운 국가건설 즉 건국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하하려는 태도가 거북한 만큼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역사를 왜곡하는 우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진보 간의 남남갈등 문제는 그나마 지금의 상황에서 마무리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건국설’은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태도로서 남남갈등의 역사적 뿌리를 한국현대사에 강제적·인위적 이식, 즉 임플란트하려는 것이다.

다.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로서 광복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방사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군의 창군과 이념, 국방조직과 국방정책의 변천, 전력의 증강, 전쟁수행, 군의 교육 훈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시작으로 미군정기의 국방사령부 산하 조직변

화에 이어 1948년 국군 창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1919년 4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같은 해 9월에 다른 지역 임시정부들과 통합하였고 지속적인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1940년 체계적인 군사조직으로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독자적인 항일 무장독립운동 외에도 중국·영국·미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광복 후 미군정 시기 국군 창설 준비과정에서도 광복군의 조직과 제도가 반영되었다. 국군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공통된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의 요직에 등용되면서 광복군이 국군창설의 요람 역할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현재 대한민국 정통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2020년 국방력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³⁾

2. 국방력의 대북 우월적 지위와 한반도의 안정성

가. 한국 안보능력의 대북 우월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3) 2020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국방력 순위 25위에 있다.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제Ⅱ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에 있다고 본다. 영토없이 해외 망명정부에서 창설된 광복군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이후 지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세계 최빈국이었던 상태에서 건설·진화되어 가는 한국 국방의 역사를 입체감 있게 서술한 점에서 이 책은 또한 평가받을 만하다. 2018년의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전력증강과 동시에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던 대한민국 국방역사의 과정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기에 충분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국방력의 대북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우리의 대북 안보력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료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작금의 한국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의 파괴력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과 한반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북한 무력도발 억지력’이고, 둘째는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이며, 셋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다. 답을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며, 다양한 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능력은 다양한 강점들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강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선제공격론 역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성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만으로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각오한다면 몇 달 내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의 순위에서도 6위와 25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GDP와 국방예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팩트(fact)이다. 북한에 대한 자주국방의 상대적 우위에 더해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의 국방력이 엄청난 군사적·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보능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과연 김정은은 핵단추를 누를 수 있을까. 잦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동북아·세계평화의 제1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강력한 내부단속 및 위협형 리더십은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핵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부로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는 참으로 든든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백데이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체제유지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다짜고짜 체제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의 요구는 남북은 물론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의 제1의 목표인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은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도발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카드는 다양한 협상력을 상실해가는 데도 아이러니컬하게 국내의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오히려 우리 정부를 대

북협상에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북핵 관련 선제타격 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⁴⁾ 미국이 북한 핵에 관하여 선제타격을 하려면 중동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프간을 때리든, 이라크를 때리든, 이란을 때리든 적극적인 반대국가가 없어야 하고 NATO 연합과 같은 우호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선제타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군사 및 정치·외교적 안보환경은 중동지역과는 정반대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선제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 내지 목인이 필요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와 목인을 하며 일본은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협조 내지 동의할 수 있을까.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는 제로퍼센트(zero percent)임에 분명하지만 유비무환 차원의 안보태세는 든든한 국방력의 과시와 역설이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이 이에 확증적 통계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한국 안보능력 수준을 제대로 소명한 양서(良書)이다.

나. 우호적 한중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성

한중관계에 있어서 유의할 것 중의 하나로서 북중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중동맹은 어쩌면 한미동맹보다도

4)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한동안 중동에 올인했던 미국의 역할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확하게는 힐러리 국무장관 때 '동아시아로의 귀환'으로 그 가닥이 바뀌었다. 세계 군사적 제패에 관한 한 소련 붕괴 후 안정제도에 들어섰음을 확신했던 미국이지만, 중국의 아시아 제패 및 중국과 미국의 세계균형 재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미국에 있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한중관계의 긴밀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더 강하고 무조건적일 수 있다. 6·25 한국전쟁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으며 북한 못지않게 중국에서 볼 때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은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에게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협력강화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통점은 공산당 지배체제라는 것이지만 두 국가의 공산당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북한과 중국의 더 큰 차이점은 중국에는 시장경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겨우 사회주의 경제에서 장마당이 비시장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은 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의 복수정당제라는 이질적인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은 시장이다. 즉, 중국은 공산당 통치 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즉 일반 국민(국민)들이 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1978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소련 동구권이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다면 중국은 훨씬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시장경제가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는 작동되지 이미 오래되었고 분야별로 협력과 경쟁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북한과의 동질성보다는 한중 간의 체제 동질성이 더 긴밀하므로 일시적인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보수적 식자층에서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호들갑 이상으로 심각한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안보와 관련된 대북정책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 편이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이라면 총력적으로 힘을 합치고 생각을 같이하여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보수적 안보방식이 옳고 진보적 안보방식이 불안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선진국가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과 토론을 한다.

대북안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진보를 통틀어 모든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찌면 보수정치세력이 더욱 강조할 부분이다. 또한,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며 이것 또한 어느 한권의 주장 내지 전유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못지않게 한미동맹에 전력을 해야 하며, 이때 비로소 남북대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제10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보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군사강국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제1장 창군의 이념을 비롯해서 국방정책, 전력증강, 전쟁수행능력 그리고 국방외교와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국방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전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의 기본적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 광복군의 창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다수의 무장 항일운동단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군대로 창설된 광복군은 일본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임무로 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창설된 이래로 보편적인 군의 임무만을 수행해온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이 국방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제IV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부분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논의와 반성이 다루어졌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의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했고, 결국 권력연장 의지의 산물로서 1인의 권력담당자를 위한 인격화된 권력구조, 입헌적 전제의 유신헌법⁵⁾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유신체제에 동원된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가상의 적과 상상적 비상사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한다는 명분에 자유주의를 고사시키고 의회주의와 선거제도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국민투표에 정통성을 부여·대체하는 방식으로, 집권자가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방향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상 대통령은 입헌적 절대전제제의 절대군주와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정부의 이원성은 상상할 수 없으며 입법부와 사법부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권 통합권력자였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군의 무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5)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서 유신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정권이 제5공화국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유신헌법은 제3공화국 이후로 소급되어 제4공화국 헌법이 되고 말았다. 기실은 유신체제를 유신쿠데타의 결과로 규정 및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유신헌법으로 칭하였다.

하고 국가권력을 침회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사에서도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 명확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군의 과거사에서 발생한 과오(過誤)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성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에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광복군의 항일 무장독립전쟁, 1950년의 한국전쟁, 1960년대 베트남전쟁 파병, 그리고 1993년 UN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지속적으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국방력 6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외국과의 국방교류협력, UN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등의 활동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사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세계평화유지군 활동은 전투목적이 아닌 의료지원단이나 공병부대 등으로 분쟁지역의 민간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평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방역사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연계·일치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치밀한 자료수집과 저자들의 해석 및 설명능력은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찾는 객관적 근거와 바로미터마저 제공하고 있다.